

북러 군사협력 논의와 평양의 지향점: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도전

황일도*

- I. 서론
- II. 북한의 상황
- III. 러시아의 입장
- IV. 국내·대외정책의 일체화
- V. 전망

국문요약

최근 북한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미 본토에 대한 확증 보복(assured retaliation)의 문턱을 넘어서는 핵전력 구조의 완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본 논문은 2023년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행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핵 전력 건설의 장기 지향점과 이에 대한 핵억제론 관점의 해석을 검토한다. 김정은 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표되는 국제정세 흐름이 이러한 장기 지향점을 달성하는 데 우호적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핵추진잠수함 플랫폼의 건설을 그 유력한 경

로 사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년 하반기 평양이 보여준 주요 국내대외정책, 즉 국경봉쇄 해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통제강화 경제정책과 핵보유 기정사실화 행보,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이른바 '반제반미연대'의 추구는 대부분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일체화돼 있다고 보는 게 한층 설명력 높은 일관된 해석을 제공해준다.

주제어: 북한 핵 전력, 핵억제론, 북러 정상회담, 통제 강화 경제정책, 다극 질서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부교수

I. 서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워싱턴 선언’의 전체 내용 가운데 가장 평양의 눈길을 사로잡았을 한 대목을 꼽자면 아마도 이 문장이었을 것이다.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에 대해서도 미측은 핵전력을 포함해 압도적 대응에 임할 것이라는 사투 간단해 보이는 이 메시지에는 기실 핵 억제이론의 공리를 오랜 기간 체화해온 워싱턴의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북한의 전술핵 사용 교리가 공식화된 이래 한미 측이 다양한 성명과 회의를 통해 같은 메시지를 발신해 온 것은, 이 문장에 핵 확산의 부담 혹은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불확실성을 누가 지느냐는 이론적 기반이 숨어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반대로 평양이 추구하고 있는 대미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능력의 조속한 완성 또한 이 억제 메시지의 기본 전제를 깨뜨리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북한의 행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핵 전력 건설의 장기 지향점과 이에 대한 억제이론 관점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우선 억제이론 관점의 해석이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한 북한의 행보와 북러 군사협력 가능성에 얽혀 있는 북측의 정책목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일관성과 논리성을 갖춘 해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러 군사협력의 논의 과정에서 향후 두 나라가 고민하게 될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도 억제이론 차원의 분석 및 전망은 단순한 관찰 혹은 평가가 놓치기 쉬운 변별성 있는 쟁점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미 측의 대북 억제 메시지와 이를 넘어서려는 북측의 시도가 모두 이러한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미 확증보복 능력의 완성을 향한 평양의 방향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공식화된 것이므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나 한미 워싱턴 선언 이후에 설정된

¹ 대통령실, “[전문] 워싱턴 선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4.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328>> (검색일: 2023. 10. 27.).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북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제정세 흐름이 자신들의 이러한 장기 지향점을 달성하는 데 우호적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년 하반기 동안 평양이 보여준 국내·대외정책은 대부분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일체화돼 있다고 보는 것이 한층 설명력 높은 일관된 해석을 제공해준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사안이 9월 1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이었음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회담을 전후해 이뤄진 다양한 외교행사를 통해 양측의 주된 관심사가 군사분야라는 점은 매우 명확해졌다. 러시아는 북한이 생산하는 재래식 포탄이 자신들의 포병전력과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들을 수입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맞닥뜨렸던 포탄의 고갈을 일정부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포탄 제공 혹은 수출이 이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져왔다는 사실은 최근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이 제공하게 될 반대급부가 무엇이 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주지하다시피 9월의 정상회담은 어떠한 합의문이나 공동성명도 남기지 않았고, 따라서 구체적인 협력의 아이টে에 대해서도 여전히 추측만이 가능한 상황일 뿐이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최대목표가 무엇인지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가늠할 수 있는바, 수많은 공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명확한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확증보복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더불어 이러한 기술협력이 러시아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며 전략적으로 한층 복잡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II. 북한의 상황

1. 한반도 핵 억제 구도에 대한 해석

2021년 초 8차 당대회에서의 공개선언을 통해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개발해 한반도 전역에서 ‘핵전투무력’ 혹은 대군사타격(counterforce)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후 최근까지 이뤄진 주요 군사훈련 내용이나 김정은 위원장 본인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이러한 교리는 점차 구체

화되었고, 2022년 7월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공식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북러 정상회담을 앞둔 8월과 9월 평양은 신규 수상함과 잠수함의 공개를 통해 이들 무기체계를 전술핵 발사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최근의 평양은 사실상 전술핵을 가능한 전방의 모든 부대, 모든 플랫폼에 배치해 유사시 남측의 군사시설 타격하겠다고 공언하는 중이다. 기술적으로 볼 때 이는 한미 측에 대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전술핵 전력으로 상쇄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는 바, 재래식 전력이 열세인 국가가 잠재적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²

다만 이러한 전술핵 사용 교리에는 한 가지 전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미 본토 타격능력이 확증보복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동안에는 - 미측이 그렇다고 인식하기 전까지는 - 미측이 압도적 핵보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³ 물론 평양은 자신들이 이미 미 본토에 대한 2차 타격능력을 완성했다고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최소한 워싱턴의 인식이 이와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북한의 대미 확증보복 능력이 완성된 후에도 미국이 북측의 핵 선사용에 대해 압도적 핵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미 본토에

²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NATO의 유연반응(Flexible Response) 전략, 2010년대 이후 파키스탄의 전영역억제(Full Spectrum Deterrence), 최근 러시아의 이른바 비확전을 위한 확전(Escalate to De-escalate) 교리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바, 관련 선행연구는 이러한 경향성을 비대칭확전(Asymmetric Escalation) 혹은 강압적 핵확전(Coercive Nuclear Escalation) 등의 용어로 개념화하고 있다;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p.13~54; Keir A Lieber and Daryl G Press, *The myth of the nuclear revolution: power politics in the atomic age* (Cornell University Press, 2020), pp.94~119.

³ 핵무장 국가들의 핵 사용 태세를 크게 촉매적 태세(Catalytic Posture), 확증보복 태세, 비대칭확전 태세로 구분한 나랑(Narang)의 연구(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는 '능력'과 '태세'를 면밀히 구별하지 않을 경우 오해하기 쉽다. 확증보복 태세와 비대칭확전 태세는 나랑의 주장대로 서로 배타적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공세적 형태의 비대칭확전 '태세'는 상대에 대한 확증보복 '능력' 없이는 신뢰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사상 존재했던 비대칭확전 태세의 주요 케이스는 실제로는 ▲이미 잠재적국에 대해 확증보복 능력을 가진 국가가 ▲상대에 대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민감하게 의식하게 되어 재래식 교전의 와중에 전술핵 등을 선사용할 수 있다는 교리를 '추가'하게 된 것에 가깝다. 즉 공세적 형태의 비대칭확전 교리는 본질적으로 확증보복 능력의 완성을 전제한 것이며, 보다 정확히는 확증보복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고자 핵교리가 '진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핵 전력이 확증보복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공세적인 형태의 비대칭확전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최근 핵 교리는 전례가 없는, 역제이론 관점에서 논리적 한계가 명확한 교리라고 할 수 있다.

대한 확증보복 능력의 확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고전적 핵 억제이론의 논의로 돌아가 보면, 재래전 상황에서 처음 핵사용의 문턱을 넘으려는 나라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제약을 심각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⁴ 즉 핵 억제에 있어 불확실성의 문제는 누가 핵 확전의 문턱을 먼저 넘으려 하는가 혹은 누가 확전으로 인한 부담을 먼저 지게 되는가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셸링(Schelling)의 초기 논의를 시작으로 포웰(Powell) 등 게임이론의 정형 방법론(formal methods)을 차용한 일련의 연구를 거쳐 정립된 이러한 개념들은 그 한계에 대한 다양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핵 억제에 관한 학술 토론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⁵

예컨대 중국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핵 실전전력화나 전술핵 사용 등과는 거리를 두는 최소억제 교리를 오랜 기간 유지해왔고, 그에 적합한 핵무기 수량을 유지해왔다.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핵 억제 게임에서 중국은 재래전 와중에 먼저 핵을 사용할 생각이 없고, 따라서 핵 확전 결정의 부담은 미측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중국의 핵 전력이 미측에 대해 확증보복의 문턱을 넘어섰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최소억제 수준의 전력이 부과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미측이 먼저 고민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⁶

반면 재래전 와중에서 전술핵을 이른바 ‘핵전투무력’으로 사용하겠다는 북한의 경우 핵 확전의 문턱을 넘는 부담을 먼저 감수해야 한다. 즉 이어지는 핵 확전의 순차 게임(sequential game)에서 평양은 미측이 압도적 보복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먼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 불확실성의 수준이 충분히 높다면 북한의 핵사용은 제약당할 공산이 크고 따라서 미국의 대북 핵 억제는 성립하게 된다. 이론적 관점에서 풀이할 때, 이러한 ‘비대칭적 불확실성(asymmetrical

⁴ Robert Powell, *Nuclear deterrence theory: The search for credi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6~32; Thomas C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Yale University Press, 2020), pp. 92~125.

⁵ 관련 논의의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Dmitry Adamsky, “Nuclear incoherence: Deterrence theory and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in Russia,”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7, no. 1 (2014); David C Logan, “The nuclear balance is what states make of it,” *International Security*, vol. 46, no. 4 (2022); Henrik Stålhane Hiim, M Taylor Fravel, and Magnus Langset Trøan, “The dynamics of an entangled security dilemma: China’s changing nuclear pos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7, no. 4 (2023).

⁶ Riqiang Wu, “Living with Uncertainty: Modeling China’s Nuclear Survivabil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44, no. 4 (2020), pp.117~118.

uncertainty)’이야말로 현재의 한반도 핵 억제 구도를 구성하는 개념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핵 전력의 수량이나 생존성에 있어 미국과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MAD) 상태에 놓인 러시아의 경우에는 재래전 상황이 불리해질 경우 전술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암시가 상대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은 러시아가 아니며,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선사용은 미국의 압도적 핵보복을 야기해 자살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⁷

특히 북한의 좁은 영토는 한미 측 정찰자산의 꾸준한 감시정찰을 가능케 하고,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ICBM의 발사각도를 매우 좁게 만드는 근본적인 제약요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미측은 유사시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핵전력을 무장해제 선제타격으로 무력화하고, 일부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알래스카에 배치된 지상배치요격미사일(Ground-Based Interceptor·GBI) 역량을 통해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피해 최소화(damage limitation) 옵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측의 인식이야말로 서두에서 보았던 한미 측의 대북 억제 메시지가 “어떤 종류의 핵무기든 사용되면 한미는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이는 김정은 체제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문장에 집중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⁸

2. 핵추진 기술의 함의

달리 말해, 이러한 대미 본토 확증보복능력의 확보는 최근 북한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전술핵 사용옵션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그간 북측의 핵전력 확충 노력이 한반도에서의 대군사타격 용도와 대미 본토용 대가치타격(counter-value) 용도를 포괄하는 이중 교리에 기반해 이뤄진 배경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북한의 근본적 한계는 좁은 영토를 벗어나 은밀성 및 생존성을 유지한 채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SLBM 전력에 대한 압력을 높인다. 주지하

⁷ Ildo Hwang, “The Illusion of ‘Escalate to De-escalate’: Pyongyang’s Calculus for Nuclear Warfighting Doctrine,” *IFANS PERSPECTIVES 2022*, no. 9 (2022), pp. 10~12.

⁸ 이러한 문구는 그간 한미 양국 사이의 주요 협의체와 공동성명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된 바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U.S. Department of Defense, “54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e,” 2022.10.3., <<https://www.defense.gov/News/Releases/Release/Article/3209105/54th-security-consultative-meeting-joint-communique/>> (검색일: 2023. 10. 27.).

다시피 이는 유사한 지리적 여건에 처해있던 프랑스와 영국이 모두 채택했던 경로이기도 하다. 그간에는 기술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과제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력 건설에 집중해왔지만, 평양이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을 핵 전력구조의 최종 지향점(end-state)에 있어, 잠수함 기반 전력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⁹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김정은 체제는 핵추진잠수함과 SLBM 전력의 구축을 5대 국방력강화 및 무기체계 계획의 하나로 공식화해 왔지만 주지하다시피 SSBN과 SLBM은 핵전력 가운데서도 가장 기술적 관문이 높은 체계다. 9월 평양은 옛 소련의 3,000t급 디젤 잠수함을 개조해 10여 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공개한 바 있으나,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위해서는 대형 플랫폼이 필수적이고 한미일 3국의 고도화된 대잠전(Anti-Submarine Warfare·ASW) 능력을 회피할 수 있는 장시간 잠항 능력도 필요하다. 다만 북한은 이미 수천 km 사거리의 SLBM 기술을 입증한 바 있으므로¹⁰ 이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플랫폼의 구축이야말로 평양에게 남아있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핵어뢰 ‘해일’ 역시 러시아의 ‘포세이돈’ 수중 드론의 경우처럼 핵추진기술과 결합할 경우 대미 본토 타격능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 본토 타격능력을 위한 최근 평양의 관심사가 핵추진 기술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 및 동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러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처음 전한 뉴욕타임즈 기사가 양측의 군사협력과 관련한 북측 요구 항목이 ‘핵추진기술’이었다고 전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¹¹ 주지하다시피 핵추진 혹은 핵잠수함과 관련한 중국의 기술 수준은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고, 따라서 관련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후보군은 평양 입장에서는 러시아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AUKUS 사례에서 보

⁹ 황일도, “북한의 장기 핵 전력구조 전망: 이론적 배경 및 선행사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시리즈 2022-05, 2023.1.), pp. 28~44.

¹⁰ 북한은 2019년 10월 이뤄진 북극성 1형 시험발사를 통해 고도 910km의 고각 사격을 시행한 바 있다. 이를 최적 에너지 궤도로 환산하면 대략 2,000~3,000km 사거리의 SLBM 능력은 입증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North Korea Finally Unveils the Pukguksong-3 SLBM: First Takeaways,” *The Diplomat*, October 03, 2019, <<https://thediplomat.com/2019/10/north-korea-finally-unveils-the-pukguksong-3-slbm-first-takeaways/>> (검색일: 2023. 10. 27.).

¹¹ “Kim Jong-Un and Putin Plan to Meet in Russia to Discuss Weapons,” *New York Times*, September 4, 2023, <<https://www.nytimes.com/2023/09/04/us/politics/putin-kim-meeting-russia-north-korea-weapons.html>> (검색일: 2023. 10. 27.).

듯 핵추진기술에 대한 비확산 규범은 핵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북측은 이러한 기술이 ICBM 등의 다른 과제보다 러시아에게 덜 부담스러운 아이탬이라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있다. 달리 말해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평양의 일차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될 포탄 제공의 반대급부로 핵추진 기술을 제공받는 거래였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물론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군사협력의 아이탬은 이외에도 다양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해주에서 방문했던 주요 시설 내역을 되짚어볼 때, 양측은 정찰위성이나 우주발사 기술, 90년대 이후 북한에 제공되지 않았던 전투기 및 항공 전력 기술 같은 아이탬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들어 평양이 보여준 SLBM과 잠수함 전력에 대한 높은 집중도를 감안할 때, 북러 정상회담 및 이후 행보에서 평양의 최대치 목표가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궁지에 몰린 모스크바의 처지를 이용해 핵추진 기술 확보를 시도한다’는 과제에 집중됐을 것이라는 관측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III. 러시아의 입장

1. 정상회담의 이유

평양의 이러한 계산과는 별개로, 북한과의 본격적인 군사협력이 모스크바에게도 그리 쉬운 선택이 아님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군사기술 협력 아이탬들은 모두 2016년 이래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체제에서 금지한 항목들이고, 러시아는 당시 이들 결의안의 채택에 모두 동의한 바 있다. 굳이 예외를 찾자면 인공위성 자체에 대한 기술협력 -이를 발사하기 위한 로켓 기술이 아닌 - 정도는 유엔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앞서 살펴본 한반도 핵 억제 구도의 근본적 특징을 감안할 때 이는 평양의 기대치와는 사뭇 거리가 있을 공산이 높다. 다시 말해 모스크바가 안보리 제재 규정을 준수하면서 ‘평양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군사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태도를 감안할 때, 러시아 정책결정그룹은 북한에 핵추진 등 고도화된 군사기술을 제공할 결심을 마쳤다기보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대미·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북핵 문제의 악화 가능성 등을 미국과 한국에 압박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우크라이나 지원방안에 대해 최소한의 레버리지를 유지하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기실 포탄과 군사기술의 교환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 성격상 비공개 협의와 은밀한 거래가 더 적절했을 것이다. 북러 관계 밀착을 매우 적극적으로 과시한 정상회담의 주요 프로토콜은, 러시아측이 실질적 거래보다는 그러한 이미지가 갖고 있는 국제정치적 영향력에 오히려 더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¹²

또한 초기의 평가와는 달리 군사협력에 대한 양측의 다급함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상황이 저강도 방어전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포탄 소모량이 러시아의 자체 생산능력으로도 감당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¹³ 정상회담을 전후한 북러 양측의 관련 담화나 해설 문장들은 명백히 ‘평양은 매달리고 모스크바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바, ‘혈맹’을 강조하는 노동신문의 보도 기조와 ‘전통적 친선 관계’ 혹은 ‘이웃국가’를 강조하는 러시아 외무성의 발언 수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¹⁴ 즉 앞서 본 대로 평양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추구하는 바가 명확한 반면, 모스크바는 이러한 평양의 처지를 활용해 자신의 전략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대리 설득논리 추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김정은 체제가 상당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해 보인다. 혹은 이미 진행된 북러 사이의 논의 과정에서 북측은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수준의 군사기술 협력이 왜 필요한지, 이는 러시아의 국익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득하기 위한 나름의 논리를 구사해왔을 것이다. 그러한 북측의 논리를 추론하는

¹² Aleksandr Golts 스웨덴 국제문제연구소(Swed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동유럽연구센터(SCEEUS) 분석관과의 인터뷰(2023.10.10.).

¹³ Karolina Hird et al., “Russian Offensive Campaign Assessment,”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October 23, 2023), p.1.

¹⁴ 이러한 온도 차이가 시작적으로 가장 잘 드러난 사례로는 노동신문 2023년 10월12일자 1면에 전문이 실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교환한 북러 관계 수립 75주년 기념 축전을 들 수 있다.

작업을 위해서도, 앞서 살펴본 이론적 관점의 논의를 연장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한 층 설득력 있는 그림을 제공해준다.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상당수 전문가들과 언론은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 등 고도로 민감한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관측한 바 있다. 예컨대 중국의 핵개발 과정을 포함해 러시아는 주변국 혹은 우호국의 핵무장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계심을 유지해왔고, 관련 기술을 확산시킨 전례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면, 확산 방지에 대한 이러한 공감대는 기존의 핵 강대국 사이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가설도 존재한다. 이는 ‘핵 강대국은 주변국의 핵무장을 막으려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상대 핵 강대국을 타격할 수 있는 군사기술을 확산하지 않는다’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그러나 이러한 가설에는 몇 가지 실증적 혹은 개념적 한계가 있다. 우선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역사적 사례들이 존재한다. 1970년대 초 프랑스가 SLBM용 핵탄두의 소형화와 다탄두(MIRV)화에서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당시, 워싱턴은 양측 로켓 공학자들의 만남을 주선해 네거티브 지침(negative guidance)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프랑스 측에 은밀한 기술협력을 제공한 바 있다.¹⁶ 더불어 영국

¹⁵ 현승수,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30, 2023.9.14); 이상근, “러북 정상회담의 결과와 파급영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465호, 2023.9.19); Ankit Panda, “What Putin and Kim Want From Each Other,” *Foreign Policy*, September 15, 2023, <<https://foreignpolicy.com/2023/09/15/russia-north-korea-putin-kim-summit-diplomacy-weapons-missiles-space-cooperation-sanctions/>>; “North Korea and Russia both seen as benefiting by striking new trade deal: ANALYSIS,” ABC NEWS, September 12, 2023,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north-korea-russia-benefiting-striking-new-trade-deal/story?id=103113195>>; “Russia-North Korea summit: ‘Comrades’ Putin and Kim send rivals a warning,” Reuters, September 14, 2023,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with-defiant-summit-putin-north-koreas-kim-send-rivals-warning-2023-09-14/>> (검색일: 2023. 10. 27.).

¹⁶ 당시 미 행정부 내부의 관련 문서들은 미측이 비확산체제 및 국내 법령을 의식해 실물이나 청사진 등을 제공하는 대신 양측 개발 담당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해 프랑스 측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 국무부 역사기록관실(Office of the Historian) 아카이브의 다음 기록들을 참고할 것;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E-15, PART 2, DOCUMENTS ON WESTERN EUROPE, 1973-1976, SECOND, REVISED EDITION, 316.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Deputy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Scowcroft)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Office of the Historian, October 13, 1973,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e15p2Ed2/d316>>; “320. Memorandum From the Deputy Director of the Office of Strategic and Space Systems, Department of Defense (Walsh) to Secretary of Defense Schlesinger,” Office of the Historian, March 6, 1974,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e15p2Ed2/d320>>; “336. Memorandum From Secretary of Defense Ru

의 핵전력 건설은 사실상 미국 측과의 합작사업 형식으로 진행됐고, SLBM 전력 건설 또한 기술적 어려움에 부딪혀 난항을 겪다가 미측의 기술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야 성공을 거뒀다. 다양한 선행연구는 파키스탄의 핵 및 미사일 전력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¹⁷

중국의 초기 핵전력 개발 또한 중소 관계가 악화되기 전인 1957~1960년 사이에는 소련측으로부터 핵폭발장치 디자인과 설계도 등 상당한 수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진행된 바 있다.¹⁸ 이후 중국의 핵전력 고도화 당시 소련의 비협조는 해당 시기에 두 나라가 적성국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등을 빚었기 때문으로 풀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 핵 강국이 다른 국가의 핵보유를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경향일 수 있으나 이들 국가 사이의 관계나 전략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다양하게 발견된다는 의미다.

특히 프랑스의 SLBM 고도화에 대한 미국의 협력 사례는 여러모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1950년대 드골 대통령의 결정으로 프랑스가 독자 핵보유를 선언하고 NATO 군사기구를 탈퇴했을 당시 미국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이러한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워싱턴은 상당한 외교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이르러 프랑스가 지대지 미사일에 장착한 핵무기를 모스크바 등에 제한적 수량으로 투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되자 미측의 입장 또한 큰 폭으로 달라졌고, 프랑스의 SLBM 조기 전력화를 은밀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크게 선회하기에 이른다.¹⁹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어차피 프랑스의 비핵화

msfeld to President Ford,” Office of the Historian, May 13, 1976,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e15p2Ed2/d336>> (검색일: 2023. 10. 27.).

¹⁷ David Albright and Mark Hibbs, “Pakistan’s bomb: Out of the closet,”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48, no. 6 (1992); Thazha V Paul, “Chinese-Pakistani nuclear/missile ties and balance of power politics,”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10, no. 2 (2003).

¹⁸ John Wilson Lewis and Litai Xue, *China builds the bomb*, vol. 3,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pp. 104~136; Zhihua Shen and Yafeng Xia, “Between aid and restriction: the Soviet Union’s changing policies on China’s nuclear weapons program, 1954-1960,” *Asian Perspective* 36, no. 1 (2012).

¹⁹ Richard H Ullman, “The covert French connection,” *Foreign Policy*, no. 75 (1989). 이러한 미국의 계산은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와 로베르트 갤리 프랑스 국방장관 사이의 1973년 8월 31일 회담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애초에 주변국이 핵개발에 나서지 않는 편이 물론 미국에게 더 유리하겠지만, 해당 국가가 이미 핵개발에 나서서 최소한의 핵전력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이를 잠재적국의 무장해제 선제공격에 취약한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은밀성과 안정성이 높은 전력의 조기 완성을 돕는 게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계산이다. 당시 양국 사이의 주요 관련 회담 대화록 목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U.S. Secret Assistance to the French Nuclear Program, 1969-1975: From “Fourth Country” to Strategic

는 불가능하며, SLBM 전력의 완성 또한 시간문제일 뿐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는 당시 미국측의 인식이다. 당시 미국-프랑스 사이의 비공개 회담 기록은,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프랑스 SLBM 전력 구축 시기를 절반 가까이 줄이기 위해 미측 공학자들의 은밀한 협력을 제공한다는 키신저의 논리를 기록하고 있다.

비교해 보자면 1970년대초 프랑스와 현재 북한의 핵 전력은 상대의 영토에 닿을지 모르는 최소한의 능력은 개발했으나, 그 취약성이 매우 높아 확증보복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고전적 핵 억제이론이 말하는 핵 불안정성(nuclear instability)의 논리를 원용하자면 오히려 현재가 더 위태로운 상태이고, SLBM 전력의 조기 고도화를 통해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게 주변 동맹국들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물론 냉전 초기 프랑스-미국의 관계를 현재의 북한-러시아 관계와 등치시키는 것은 현명한 방법론이 아닐 것이나, 최소한 주변국 핵무장에 대한 강대국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평양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제시할 수 있는 유리한 선례를 갖고 있음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향후 북러 두 나라는 북한의 포탄 제공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반대급부의 ‘적정 가격’을 두고 마후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고, 북측의 지원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앞서 살펴본 다양한 논점들을 활용해가며 러시아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려 시도할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협상의 과정과 결론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고, 특히 고도로 민감한 영역에서의 기술협력이 이뤄진다면 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앞서 본 1970년대 미국과 프랑스의 SLBM 기술 협력은 1989년 일부 연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지만 냉전 종식 기류가 명확하던 당시에도 양국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들어 관련 회담에 대한 주요 문서와 대화록이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역사적 사실로 확인됐을 뿐이다. 북러 사이의 군사기술 협력 수준 또한 외부에서는 이후 북측의 관련 기술 개발과 이에 기반한 무기체계의 발전 속도를 두고 가늠할 수

Partner,” Wilson Center, <<https://www.wilsoncenter.org/publication/us-secret-assistance-to-the-french-nuclear-program-1969-1975-fourth-country-to-strategic>> (검색일: 2023.10.27.).

밖에 없게 될 공산이 크다. 현재로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해관계의 일치를 이룬 것은 바로 이 부분, 즉 기술협력의 가능성을 암시하되 모호한 상태로 두는 것이 각자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계산이 엄청난 수준의 미디어 노출을 수반하는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IV. 국내·대외정책의 일체화

1. 핵보유 기정사실화 행보

거칠게 말하자면, 김정은 체제의 현재 대외정책은 거의 예외 없이 앞서 살펴본 대미 확증보복 능력의 완성이라는 지향점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9년 연말 이래 지속돼 온 통제강화 경제정책 또한 이러한 방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 동원의 틀을 견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2023년 하반기 평양의 대외정책 행보는 ▲전술핵 투발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상함과 로미오급 잠수함을 공개하는 동시에 ▲북러 정상 회담에 즈음해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을 통해 대미 본토타격 능력의 조기 완성 가능성을 암시하는 한편 ▲국경봉쇄 해제 이후에도 통제강화 경제정책에 기반한 자원의 중앙집중을 지속해 이들 전력의 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타진해 안정적인 핵전력 구조의 건설에 활용하고자 시도하는 한편, 중국과는 이에 필요한 자원 및 자원 마련을 위해 관광이나 OEM 생산 등의 영역에서 공식영역의 통제 하에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외화 등의 중앙집중에 매진하려는 복안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국내외에서 제기된 질문 중 하나는 중국의 입장 혹은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북한 핵무장에 대한 중국의 견해는 매우 비판적이었고, 이는 2017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정 동참 등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최근의 북러 군사기술 협력 혹은 이른바 북중러 3각 협력체제 시나리오와 관련해 베이징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명확해 보인다. 다만 러시아가 실제로 군사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용의가 있는가 혹은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논리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한의 핵 전력의 장차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또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은, 평양이 현재까지 개발경로를 확보한 무기체계와 기술만으로도 주변국 모두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수준의 핵전력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 이상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놓고 보면 김정은 체제로서는, 자신들의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중국과 러시아에 확신시키는 것이 핵추진 기술로 대표되는 대미 본토 타격능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비핵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는 경우 관련 협력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불안감 혹은 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판단할 개연성이다. 분명한 것은, 정상회담을 앞둔 일련의 외교행사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 자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이제 모호성의 영역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7월27일 이른바 ‘전승 기념일’을 앞두고 방북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핵전력의 주요 무기체계를 전시한 행사장을 관람하고 이들 체계가 모두 등장한 기념일 열병식의 연단에 주빈으로 오른 것은, 러시아가 자신들의 핵무장을 사실상 승인해주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던 평양의 계산에 따른 것이었을 공산이 충분하다.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체제는 핵무력 보유를 명문화한 헌법 개정을 단행하는 등 자신들은 이미 핵국가이며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바, 이는 ‘북한의 핵보유는 돌이킬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대미 확증보복능력의 완성을 러시아의 협력 - 혹은 중국의 묵인 - 을 확보하기 더 쉬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이 공개된 9월 말 최고인민회의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또한 미국한국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적 청중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2. 전력 건설에 유리한 경제정책 유지

국내 정책 관점에서 살펴보면, 김정은 체제가 이러한 경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제조건, 즉 국내정치적 안정과 자원동원을 위한 경제구조 구축이라는 과제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전자를 위해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언론은 북러 정상회담의 성과와 농업 분야에서의 생산 제고를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2023년을 ‘전염병 고난을 극복한 승리의 한 해’로 이미지화하는 데 선전선동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²⁰ 장기화된 제재 체제와 국경봉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 와중에도, 부분적 교역 재개로 형성된 일종의 기저효과를 적극적으로 선전 선동에 활용함으로써 부실한 국내정치 성과를 만회하기 위해 애쓰는 증으로 풀이할 수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국경봉쇄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통제강화 기조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는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을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9월 최고인민회의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내각에 권한이 집중된 중앙집권형 경제구조가 필요한 이유를 최고지도자 본인의 욕성으로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바, 북한 관영언론이 경제정책이 국내경제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위협에 대응하는’ 정치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사한 소규모 핵전력 보유국의 선례를 살펴보면 핵실험 등 초기 핵개발 과정에서 이들 무기체계를 양산해 전력화하는 과정에서 큰 폭의 국방예산 증가가 발생했다는 공통적 특징이 나타난다.²¹ 프랑스의 경우 잠수함 건조와 SLBM 전력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971~1975년 전체 국방비 170억 달러의 3분의1 가량을 핵전력 건설에 투입했다는 회고가 있다.²² 평양이 본격적인 잠수함 탑재 핵 전력 구축 및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선언한 지금으로서는, 그간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 전력 구축과 비교해봐도 더 높은 수준의 자원 집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자원 동원은 사경제 영역의 시장활동을 암묵적으로 용인함으로써 생산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김정은 집권 초기의 경제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목표일 수 있다. 2019년 연말 이후 본격화된 통제강화 기조의 경제정책은 제재 및 팬데믹 대응과 함께 이러한 자원동원을 위해 공식영역의 사경제 의존현상을 최소화하고, 중간관료그룹과 돈주들이 착복하던 자원 및 이윤을 중앙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라면, 국경봉쇄 해제 이후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대외경제활동 역시 자원의 중앙집중이 가능한 형태로 재편

²⁰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동신문 2023년 10월 16일자 1면 특집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는 자랑스런 혁신적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하자”를 들 수 있다.

²¹ 프랑스와 영국의 해당 시기 국방예산 추이는 다음을 참조; The World Bank DataBank, “Military expenditure (current LCU) - Franc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MS.MI.L.XPND.CN?locations=FR>>; The World Bank Databank, “Military expenditure (current LCU) - United Kingdom,”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MS.MIL.XPND.CN?locations=GB>> (검색일: 2023.10.27.).

²² “FRANCE TO UPGRADE HER NUCLEAR FORCE,” *The New York Times*, July 31, 1970, <<https://www.nytimes.com/1970/07/31/archives/france-to-upgrade-her-nuclear-force.html>> (검색일: 2023.10.27.).

돼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즉 중국 업체들로부터 OEM 등의 방식으로 가발 등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비즈니스 모델 또한 2019년 이전처럼 각 공장·기업소에 자원 처분에 대한 높은 자율성을 용인해 주기보다는, 전력건설을 위해 최대한 중앙으로 귀속시키는 형태로 재구성하는 편이 더 유리할 것이다. 대외교역 규모와 액수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강화된 수년 사이의 흐름이나,²³ 각 기업소·농장 별로 이른바 ‘애국자금’을 각출하고 있다는 관련 보도는²⁴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의 연장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V. 전망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과 한미 워싱턴 선언의 핵심이 미측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 강화라면, 현재의 평양은 바로 그 확장억제의 신뢰성 약화 혹은 형해화를 최고의 정책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SLBM과 핵추진잠수함으로 대표되는 은밀성 높은 미 본토 타격능력 확보를 통해 확증보복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면, 유사시 핵 확산의 부담은 평양이 아닌 워싱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한반도 내에서의 전술핵 사용 이후에도 미측의 압도적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계산이다. 더불어 평양은 그간 꾸준히 누적돼온 미중·미러 대립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나비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그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자 대외·대내 정책을 일체화해가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신냉전 기류 혹은 블록화 기류가 강화될수록 북한이 핵무력 건설의 기정사실화를 이룰 국가에게 암묵적인 방식으로나마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더욱 커질 것이고, 북한의 확증보복 능력 확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부담 혹은 고민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평양의 계산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중심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를 무너뜨리고 달러화 중심의 국제경제체제를 흔들며 ‘대안적 체제’를 만

²³ 최봉대, “북한 김정은 정권 기업개혁의 정치적 배태성: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 기업소 무역 및 합영·합작사업의 제한성 문제,” 『현대북한연구』, 제26권 2호 (2023), pp. 18~22.

²⁴ “조국수호의 전호를 함께 지켜가려는 승고한 자각의 발현,” 『노동신문』, 2023.10.14., 3면; “북일부 농민, ‘애국미’ 선 공제 결산분배에 반발,” RFA, 2023.10.25.,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riceration-10252023083716.html> (검색일: 2023.10.27.).

들어야 한다는 구조적 차원의 거대담론 또한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중이다. 현 러시아 집권층이 오랜 기간 주장해온 이른바 ‘다극 국제 질서(Multipolar International Order)’라는 용어를 고스란히 차용해 반복 구사하는 최근 북한의 외교담론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8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와 10월 상하이협력기구(SCO)에 대한 북한 관영언론의 보도 태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들 다자국이 탈리화 중심의 기존 경제체제를 흔들고 미국을 배제한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협력을 추구하는 ‘반미반제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대표적이다. 더욱이 최근 노동신문은 제3세계 혹은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 사이의 협력 움직임이나 이들 국가와 평양 사이의 전문교환 등을 매우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바, 이들 국가들 사이의 연대 구축(coalition building)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체제로 상징되는 현재의 국제정치 판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리라는 희망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비핵화를 통해 기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제재를 해제받는 모델’ 대신 ‘기존 국제사회의 해체 혹은 반미 국가들 중심의 연대질서 구축을 통해 핵보유를 유지하면서도 제재 체제가 형해화되는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양의 기대는 BRICS와 SCO의 영향력이나 참여국 사이의 입장 차이, 특히 주요 국가가 미국 중심 기존 경제질서에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통합돼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실성 있는 계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후 러시아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국제질서의 구조적-총체적 재편 담론’에 편승하는 것이 장기 핵전력구조의 완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위해 훨씬 더 적합한 수단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라면, 북한으로서는 대미 혹은 대남 정책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대결적 자세를 보이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러-우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와 입장을 완벽히 일치시키고 우크라이나를 가혹하게 비난하는 일련의 메시지들은 이러한 대결적 구도를 - 특히 러시아 측에 - 효과적으로 어필할 가장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측의 외교담론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과거 중동의 우호국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산 또한 명확히 드러낸다. 최소한 2024년 연말 대통령 선거를 통해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 및 동맹정책의 향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북한의 대외전략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공산이 커 보인다.

■ 제출: 11월 8일 ■ 심사: 11월 21일 ■ 채택: 11월 28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Lewis, John Wilson and Litai Xue. *China builds the bomb*.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 Lieber, Keir A and Daryl G Press. *The myth of the nuclear revolution: power politics in the atomic age*. Cornell University Press, 2020.
- Narang, Vipin.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Powell, Robert. *Nuclear deterrence theory: The search for credi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Schelling, Thomas C. *Arms and influence*. Yale University Press, 2020.

2. 논문 및 보고서

- 이상근. “러북 정상회담의 결과와 파급영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465호, 2023.9.19.
- 최봉대. “북한 김정은 정권 기업개혁의 정치적 배태성: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 기업소 무역 및 합영·합작사업의 제한성 문제.” 『현대북한연구』. 제26권 2호, 2023.
- 현승수.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30, 2023.9.14.
- 황일도. “북한의 장기 핵 전력구조 전망: 이론적 배경 및 선행사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시리즈. 2022-05, 2023.1.
- Adamsky, Dmitry. “Nuclear incoherence: Deterrence theory and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in Russia.”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7, no. 1, 2014.
- Albright, David and Mark Hibbs. “Pakistan’s bomb: Out of the closet.”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48, no. 6, 1992.
- Hiim, Henrik Stålhane et al. “The dynamics of an entangled security dilemma: China’s changing nuclear pos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7, no. 4, 2023.
- Hird, Karolina et al. “Russian Offensive Campaign Assessment.”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October 23, 2023.
- Hwang, Ildo. “The Illusion of ‘Escalate to De-escalate’: Pyongyang’s Calculus for Nuclear Warfighting Doctrine.” IFANS PERSPECTIVES. no. 9, 2022.

- Logan, David C. "The nuclear balance is what states make of it." *International Security*. vol. 46, no. 4, 2022.
- Panda, Ankit. "What Putin and Kim Want From Each Other." *Foreign Policy*. September 15, 2023.
- Paul, Thazha V. "Chinese-Pakistani nuclear/missile ties and balance of power politics."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10, no. 2, 2003.
- Shen, Zhihua and Yafeng Xia. "Between aid and restriction: the Soviet Union's changing policies on China's nuclear weapons program, 1954-1960." *Asian Perspective*. vol. 36, no. 1, 2012.
- Ullman, Richard H. "The covert French connection." *Foreign Policy*. no. 75, 1989.
- Wu, Riqiang. "Living with Uncertainty: Modeling China's Nuclear Survivabil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44, no. 4, 2020.

3. 기타 자료

『노동신문』.

ABC NEWS.

New York Times.

Reuters.

RFA.

The Diplomat.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미국 국무부 역사기록관실. <history.state.gov>.

미국 국방부 <www.defense.gov>.

The World Bank DataBank. <data.worldbank.org>.

Wilson Center. <www.wilsoncenter.org>.

Abstract

DPRK-Russia Military Cooperation and Pyongyang's Objective: Challenge to U.S. Extended Deterrence

Hwang, Il do

North Korea's primary objective in recent years has been to establish a nuclear force capable of assured retalia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mainland. This paper analyzes Pyongyang's long-term aspiration to build such a force and interprets it through the lens of nuclear deterrence theory,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events surrounding the North Korea-Russia summit on September 13, 2023. North Korea perceives that global developments, exemplified by Russia's intervention in Ukraine,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realizing this long-term goal. The construction of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SLBMs) and nuclear-propelled submarines is viewed as the most feasible path to achieving this objective. Much of North Korea's major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in the latter part of 2023, including its sustained control-enhanced economic policy after the border blockade was lifted, its constitutional declaration as a nuclear state, and its pursuit of "anti-imperialist solidarity" with Global South nations, can be understood as contributing to the pursuit of these objectives.

Key Words: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nuclear deterrence theory, North Korea-Russia summit, control-enhanced economic policy, multipolar international order.